

제공일자	2013. 10. 23(수)	담당자	이승준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02-3775-9051)	연락처	02-3775-9030 010-6290-0369	총3매

제목 : 보험연구원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이승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보험 시장 적용으로 인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법체계 정비와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를 제시
-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적용제외를 받기위한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 형태로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 보험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되, 보험회사가 행정지도에 따르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지에 대한 행정당국 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

□ 보험연구원은 24일(목)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에서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보험요율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금융정책실 이승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보험시장 적용제외를 규정하는 법체계의 정비와 당국 간 행정지도 절차의 명확화를 제안함.
- 주제 발표 이후 정호열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경쟁법 학계, 법률가,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

리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법체계 정비와 행정지도 절차개선 필요

-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에 의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하여 왔음.
 -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 되었으나,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행정지도에 의한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시작됨.
 - 2000년 이후 보험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임.
- 이러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법체계가 미비하고,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회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됨.
- 또한,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공동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를 떨어뜨려, 산업발전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음.
 -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될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폭되고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

- 이승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 공동행위와 조건 등을 명시하고, 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경쟁당국과 사전에 의견수렴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할 것을 제안하였음.
 -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토
 - 보험업법에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시장 경쟁 제한 행위도 재무건전성과 함께 규제
 -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는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맞도록 자제하되, 경쟁당국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
 - 보험회사도 필요시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 실질적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원적 규제가 보험산업 법규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쟁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은 법체계의 정비와 당국 간 사전 의견조율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원적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경우,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별첨>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